윤 대통령 "복합위기 해법은 디지털 전환 통한 공급혁신"

발리서 'B20서밋' 기조연설
"디지털 공간 보편적 가치 구현"
"디지털 질서 재정립 앞장설 것"
한미 프놈펜서 '50분 정상회담'
바이든 "한국기업 고려 IRA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각국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할 해법의 핵심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급 혁신'에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발리에서 주요20개국(G20) 회원국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Summit)에 참석,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산업, 데이터와 결합하며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최대 역점 분야도 디지털 전환이라면서 낡은 규제 혁신, 디지털 인재 양성, 인공지능(AI)·차세대 통신·사이버 보안 등 핵심 디지털 분야 기술 개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등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질서' 재정립 필요성도 강조하며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안보·경제 현안을 조율했다. 14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사흘째인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약 50분간 회담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5월 방한 이후 6개월 만이다. 두 정상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된 프놈펜을 나란히 찾으면서 성사됐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동시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나 반갑다"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고,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억지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확인하기로 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회담에서는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이슈도 테이블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인플레감축법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인플레감축법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인 내년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중진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받아들여선 안돼"

장제원 "원내대표 직격…갈등 아니다"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14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국조)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중진 연석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만장일치였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국조는) 그야말로 정치공세의 장(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 국조'를 하자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중진 의원들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가장 진상 규명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조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 원내대표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는 서병수·정우택·정진석·조경태(이상 5선), 이명수·홍문표(이상 4선), 권은희·김상훈·김태호·박대출·성일종·윤영석·이종배·이헌승·장제원·하태경(이상 3선)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에서 '웃기고 있네' 필담으로 논란이 된 강승규·김은혜 대통령실 수석을 퇴장시킨 주 원내대표의 처사를 비판했던 것에 대해 "당의 강한 기류에 대해 언급한 거지, 갈등 야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사이에서 부글부글하다"며 주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튿날 "(퇴장 배경에) 말못 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반등 34.6%

리얼미터 조사…부정 평가 63.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반면 부정 평가는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6%, 부정 평가는 63.4%로 각각 나타났다.

전주 보다 긍정 평가는 0.4%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도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직후였던 직전 조사에서 전주 대비 1.5%포인트 하락했지만,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다시 소폭 상승하며 반등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2주 연속 전주 대비 증가세(0.7%p↑, 1.0%p↑)를 나타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9.4%p↑)과 서울(4.2%p↑), 50대(4.4%p↑), 중도층(2.5%p↑), 학생(11.9%p↑) 등 집단에서 비교적 높게 상승했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9.7%p↑) 지역과 70대 이상(5.8%p↑), 보수층(4.7%p↑) 등에서 높아졌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36.1%, 더불어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한 46.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공수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정당"

법원, 제보 사주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무혐의 처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1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함께 고발당한 조성은 씨와 성명불상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도 타당하다고 봤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9월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 조직을 동원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선 경선 중이던 윤 대통령 측은 조씨가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 박 전 원장과 전직 국정원 직원 등이 개입했다며 같은 달 13일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올해 6월 이 같은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세 사람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 임산부 배려 캠페인 •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임산부는 임신기간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과 구토, 과다한 피로감, 우울감 등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으며, 특히 겉으로 구분이 잘 안되는 임신 초기에는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유산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배려, 우리 모두 함께해요
•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거나 양보하기
• 줄서기를 하고 있다면 임산부에게 순서 양보하기
• 모두에게 해로운 담배, 임산부에게는 특히 더 조심하기
•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는 금물
• 출산 전·후 휴가와 단축근무 신청은 당연한 권리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